

기 관 경 고

기 관 명 : 전라남도 여수시

2020년 여수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소속 직원들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관행적으로 전별금을 수수하는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경고처분하오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23.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기관경고

제 목 전별금 수수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 관 명 여수시

훈 계 대 상 자 ① 여수시 ◆◆◆◆동 지방**** ○○○
(前 ◆◆◆◆동)
② 여수시 ◆◆◆◆면 지방**** ○○○
(前 ◆◆◆◆동)
③ 여수시 ◆◆◆◆과 지방**** ○○○
(前 ◆◆◆◆동)
④ 여수시 ◆◆◆◆과 지방**** ○○○
(前 ◆◆◆◆동)
⑤ 여수시 ◆◆◆◆과 지방**** ○○○
(前 ◆◆◆◆동)
⑥ 여수시 ◆◆◆◆과 지방**** ○○○
(前 ◆◆◆◆동)
⑦ 여수시 ◆◆◆◆과 지방**** ○○○
(前 ◆◆◆◆동)
⑧ 여수시 ◆◆◆◆과 지방**** ○○○
(前 ◆◆◆◆동)
⑨ 여수시 ◆◆◆◆과 지방**** ○○○
(前 ◆◆◆◆동)

내 용

① 지방**** ◎◎◎는 201○. ○. ○.부터 201○. ○. ○.까지 ◆◆장으로 201

○. ○. ○.부터 현재까지는 ◆◆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② 지방**** ◎◎◎은 201○. ○. ○.부터 201○. ○. ○.까지 ◆◆동장으로 근무하였으며, ③ 지방**** ☆☆☆은 201○. ○. ○.부터 201○. ○. ○.까지, ④ 지방**** ♡♡♡는 2016. 8. 8.부터 2017. 7. 3.까지 각각 ◆◆동장으로 근무하였으며, ⑤ 지방**** ▣▣▣는 201○. ○. ○.부터 201○. ○. ○.까지, ⑥ 지방**** ◎◎◎은 2019. 1. 7.부터 2020. 1. 7.까지, ⑦ 지방****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각각 ◆◆동에 근무하였고, ⑧ 지방**** ♣♣♣는 201○. ○. ○.부터 201○. ○. ○.까지, ⑨ 지방****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각각 ◆◆동에서 근무하였다.

여수시는 2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3개 면(남면, 화정면, 삼산면)을 제외한 24개 읍면동¹⁾이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여수시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지급 받은 전별금 등의 내역은 “[표] 전별금 등 개인별 지급 내역 명세”와 같다.

[표] 생 략

1. 여행경비 수수(○○동장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은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장의 직위에 있는 자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여행경비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했고,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했다.

그런데 지방**** ◎◎◎는 본인이 근무중인 ☆☆☆과 ★★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본인의 해외여행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50만 원을 여행경비로 수수한 사실이 있다.

비록 지방**** ◎◎◎가 금품을 받은 후 현금기부 방식으로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 전액을 다시 돌려주는 등 상계처리가 인정되는 방식으로 금전을 반환하였

1)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상동, 삼일동, 묘도동

고, 이로 인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금품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은 행위 자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전별금 수수(♣♣♣장 ○○○ 등 33명)

여수시 6개 동(**동, **동, **동, **동, **동, **동)의 직원 33명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하던 동을 떠나는 와중에 개최된 송별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1인당 5~10만 원을 받았으며 위 33명이 2017년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받은 전별금 총액은 255만 원임 확인되었다.

여수시는 전별금을 받은 시점이 해당 동에서의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이므로 업무상 관련이 없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송별회가 개최된 시점에서 해당 공무원이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 특혜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민간인인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부터 전별금을 받은 행위 자체는 「지방공무원법」 제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명절선물 수수(◇◇◇장 □□□ 등 5명)

여수시 월호동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5명(□□□, ▼▼▼, ♥♥♥, ♣♣♣, ◎◎◎)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부터 3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는 등 총 1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액(3만 원)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허용되는 범위(5만원 이내) 내의 선물에 해당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

그러나 해당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의 밀접한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이다.

4. 기타

여수시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24개 읍면동 중 여천동과 삼일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동은 직원 송별회, 직원 체육대회 등 읍면동 자체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수시로 각종 협찬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직원들은 관행 또는 개인이 직접 받는 협찬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직원이 이러한 관행의 잘못된 점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등 직원들의 청렴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다방면의 잘못된 관행문화 근절과 직원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관행 문화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 부족은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여수시가 하위등급을 받는데 영향이 있음을 배제할수 없으며, 이로 인해 여수시 행정에 대한 주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여수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련 자생단체 등으로부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별금을 포함한 금전이나 선물 등을 개인이나 읍면동에서 받지 않도록 직원 전체를 교육하는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읍면동 감사시 읍면동 내 자생단체 등으로부터의 전별금 등 수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재발시 엄중문책 하시기 바랍니다.
- ③ 관행 문화 근절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개선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2020. 12. 31.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